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
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	배포일시	2021.12.15.(수)
담당부서	교통 안전	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	담당자	팀장 최승욱, 사무관 김용관 (044-200-2555, 2559, 2556)
		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		과장 강성습, 사무관 장상준 (044-201-3862, 3863)
	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	과장 김정훈, 사무관 권순관 (044-205-4210, 4219)
		경찰청 교통안전과		과장 양우철, 경정 최대근 (02-3150-2052, 2152)
	산업 안전	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		팀장 최승욱, 사무관 오현석 (044-200-2555, 2556)
		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	과장 손필훈, 서기관 최재윤 (044-202-7682, 8811)
	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		과장 서정관, 사무관 안일찬 (044-201-3573, 3562)
		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		과장 허익배, 사무관 김윤호 (044-205-6330, 6336)
	자살 예방	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		팀장 양소영, 사무관 강혜경 (044-200-2551, 2553)
		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		과장 원소윤, 사무관 박소영 (044-202-3890, 3891)
		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		과장 채수경, 사무관 홍미가 (044-205-3101, 3120)
		경찰청 생활질서과		과장 박영수, 경사 정영민 (02-3150-2047, 1311)

국민생명 지키기 3대 분야(교통·산재·자살) 사망자 감소를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, 중점 추진하겠습니다!

구윤철 국무조정실장, 제13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 주재

- (MOU체결) 구윤철 국무조정실장-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(MBC 사장), '3대 분야 사망자 줄이기' 국민 공감대 확산 위한 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(18~)」 홍보 업무협약 체결
- (점검협의회) “사망자 감소 성과가 가시화*되고 있으며,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10대 과제 선정, 집중 추진을 통해 국민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” 당부

*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

- ▶ (교통) ①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, ②이륜차 안전사고 예방, ③사업용차량 안전대책 강화
- ▶ (산재) ①대책 현장 작동성 강화, ②소규모 현장 지원 확대, ③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
- ▶ (자살) ①코로나 우울관리 강화, ②고위험군 관리 강화, ③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, ④자살유해환경 집중관리

■ 정부는 교통·산재·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획기적 감소를 목표로 '18년부터 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①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(구윤철 국무조정실장)과 한국방송협회(박성제 회장)는 12월 15일(수) 12시, 「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」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- 양 기관은 교통·산업 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,
- 3대 분야 관련 보도, 공익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공동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이를 위해,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(3대 프로젝트 관련 협업사례) 정부-EBS 지식채널-e와 협업하여 교통·산업안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공동 기획방송 제작('사람이 있었다' 편, 3부작). 송출

- ②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어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*’를 주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·논의하였습니다.

* (참석) 행안부·복지부·고용부·국토부, 경찰청 차관급

< 교통안전 3대 과제 >

- ‘16년 대비 ‘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8.2% 감소(4,292 → 3,081명, 연평균 8%)하였으며, 올해(11월 기준)도 사망자가 8.0%(2,865 → 2,635명)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11월 들어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*하고 있어, 교통안전 취약분야인 보행자 보호, 이륜차 안전, 사업용 차량 안전 등 3대 과제**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.

* (1~10월) '20,604→'21,2,354(Δ25명/月), (11월) '20,261→'21,281(+20명)

- ** ① 횡단보도 일시정지 확대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
 ② 「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^{가칭}」 제정 추진 등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
 ③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(화물차, 렌터카 등) 차량 안전 대책 강화

< 산업안전 3대 과제 >

- ‘16~‘18년 900명대 중후반이던 산재 사고사망자는 ‘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’ 추진(‘18.1월)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전면개정(‘19.1월) 등 노력으로, ‘19년 이후, 800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.
- 다만, 대책의 현장 안착 지연, 소규모 현장 지원 부족 등으로 최근 감소폭*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**를 선정하였습니다.

* '21.11월말 기준(잠정), 산재 사고사망자는 '20.11월 대비 25명 감소(815명 → 790명)

* 전년대비 증감율(사망자수) : ('18) 0.7% ↑ (971명) → ('19) 11.9% ↓ (855명) → ('20) 3.2% ↑ (882명) → ('21.11월) 3.1% ↓ (790명)

- ** ① 사업주·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노력 등 안전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
 ②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
 ③ 지자체 산재 예방 활동 지원 등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

< 자살예방 4대 과제 >

- '18~'19년 증가하던 자살사망자는 '20년 감소세로 전환하여 '21년 9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.
 - * '20년(13,195명) 자살사망자는 '19년(13,799명) 대비 4.4% 감소(△604명)
 - ** '21.1~9월(9,689명^{잠정}) 자살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.8% 감소(△385명)
-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어려움,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 등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책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책 추진, 자살시도자 및 자살사망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등 4대 과제*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 - * ①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 등 정신건강 관리 강화
 - ② 자살시도자·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
 - ③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 등 위기대상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추진
 - ④ 사이버상 자살유발 유해정보 확산 방지 강화 등 자살유해환경 집중 관리

※ <붙임 : 10대 과제 주요내용> 참고

-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“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부처가 노력한 결과, 교통안전,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”면서,
 - “올해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,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” 관계부처에 당부하였습니다.

《 국민생명지키기 3대 분야 사망자 통계 현황 》

(단위 : 명, %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(잠정)
교통사고 (전년대비)	4,292 (△ 7.1%)	4,185 (△ 2.5%)	3,781 (△ 9.7%)	3,349 (△ 11.4%)	3,081 (△ 8.0%)	2,635 (△ 8.0%)
산재사고 (전년대비)	969 (1.5%)	964 (△ 0.5%)	971 (0.7%)	855 (△ 11.9%)	882 (3.2%)	790 (△ 3.1%)
자살 (전년대비)	13,092 (△ 3.1%)	12,463 (△ 4.8%)	13,670 (9.7%)	13,799 (0.9%)	13,195 (△ 4.4%)	9,689 (△ 3.8%)

* '21년 통계: 교통·산재 11월말, 자살 9월말 기준

◆ **교통안전 분야**

□ 정부는 22년까지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보행자, 이륜차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① (보행자) 횡단보도*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, 과속에 의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권한**을 도로관리청으로까지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습니다.

* ① 일시정지 확대(現: 보행자가 건널 때→改: 건너려 할 때), ②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

** (現) '무인단속장비' 설치는 경찰청·지자체만 설치 → (改) 국토부 등 도로관리청 추가

-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체계 도입,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② (이륜차) 불법 이륜차(불법튜닝, 번호판 미부착 등)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생애주기별(신고-검사-정비-폐차)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시범 운영 등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개인형 이동장치(PM)에 관한 법률(가칭) 제정을 통해 PM 안전 제도 강화 및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.

③ (사업용) 사업용 차량 특별안전점검 기준과 대상 확대* 등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기준: (現) 사망·중상3명→(改) 사망·중상2명 / 대상: (現) 화물차·버스·택시→(改) 렌터카 포함

- 특히, 화물차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, 과적·적재 불량 및 안전장치 장착 여부 등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 운전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◆ 산업안전 분야

□ 정부는 '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추가 과제를 발굴·논의하였고, 이 중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① (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) 그간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및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*하고, 사업주·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집중 홍보**하겠습니다.

* 국무총리 현장 점검: 건설업('21.5월), 제조업('21.12월)

** (핵심 메시지) “추락·끼임” 막을 수 있습니다 (실천안전수칙) ①안전모·안전대 착용, ②작업발판·안전난간 설치, ③덮개, 울 설치, ④정비·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등

② (소규모 현장 지원 확대) 전체 산재 사망자의 72%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*하는 한편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**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* 위험기계 교체/위험공정 개선('21년 5,271→'22년 5,607억), 클린사업조성('21년 1,218→'22년 1,758억)

**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배포, 소규모기업 대상 ‘안전관리 현장지원단’ 운영 등

③ (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) 각 정부 부처의 소관업무와 관련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활동은 해당 부처에서 1차 수행토록 하고, 지자체도 산재예방 활동*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* 지자체 산재예방 계획 수립, 교육·홍보, 사업장 지도 등 개정(산업안전보건법 시행, '21.11.19)

◆ 자살예방 분야

□ 정부는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① (코로나 우울 관리 강화) 전국민이 적시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자살 예방전화(1393) 상담인력을 확충*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 상담체계 운영을 연장** 실시합니다.

* 1393 상담사 수 ('20) 26명 → ('21) 57명 → ('22) 80명

** (당초) '21.12월까지 → (연장) '22.3월까지

② (고위험군 관리 강화)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및 지원을 위해 본인 동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시작하도록 「자살예방법」 개정*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사례관리 연계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및 파기 조치
- 아울러, 정신과가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정신과 치료로 연계하는 '동네의원 - 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'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자살 60일전 60%는 동네 일반의원 방문, 19%만 정신과 내원(서울대, 2019)

③ (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)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들이나 특수직업군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살예방정책*을 추진하고, 언론계와 협력하여 보도 문화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.

* 고위험군 조기발굴, 치료연계 등 서비스 지원, 자살예방 인프라구축,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

④ (자살유해환경 집중 관리) 사이버상 자살유발을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유튜브, SNS 등 규제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- 아울러,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단 연중 운영을 통해 유해정보 확산을 방지하고,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불법유통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